

사회

■ 르포- 음란물 범람 성인 PC방 가보니

적나라한 아동 가득 '밀실의 퇴폐'

미성년 포르노까지... 성범죄 총동 우려



성인 PC방 내부 모습.

“전화방도 이용하십니까?” 6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한 성인 전용 PC·전화방. 계단을 따라 건물 3층으로 올라가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적힌 팻말이 눈에 띄었다. PC방에 들어서자 아르바이트생이 “컴퓨터는 시간당 6000원이고, 전화방은 1만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눈에도 분위기가 어느 PC방과는 달랐다. 어두컴컴한 통로 양옆으로 10여 개의 밀폐된 방이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컴퓨터 한 대와 전화기, 휴지, 재떨이가 비치돼 있었다. 심지어 발 받침과 슬리퍼까지 있었다. 캔커피와 사탕은 무료로 제공됐다. 알바생이 커피를 가져다주면서 “전화방을 이용하면 여성들에게 전화가 걸려 온다”고 넌지시 말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메인 화면에 ‘아동’(야한 동영상) 폴더와 함께 각종 성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

콘이 등장했다. 폴더 안에는 아동이 국가별, 연령대별, 종류별로 나뉘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수천개가 넘었다. 경찰 조사결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3·구축)도 성인 PC방에서 아동 음란물을 즐겨 본 것으로 나타나 이 곳은 성범죄 총동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각종 아동들은 ‘셀프’, ‘근친’, ‘임산부’ 등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다. 아동들은 하나같이 성기가 여과없이 노출됐다. 팔카 폴더에는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서 플래 찍힌 영상들이 즐비했고, 유명 연예인의 누드 화보 동영상도 눈에 띄었다. 특히 다수의 성인 남성들이 여자 1명을 남치며 성폭행하는 아동 등 범죄심리를 자극하는 동영상도 수습해가 넘었다. 또 소년·소녀라고 적힌 폴더의 영상에서는 옛때 보이는 소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밀실은 전혀 방음이 이뤄지지 않아 옆방의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 평일 오후였지만 오가는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PC방을 나서면서 “언제 문을 열었느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알바생은 “잘 모르지만 꽤 된 것으로 안다. 단골도 많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음란퇴폐 성인PC방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하다.

PC방은 자유업종으로 경찰이나 자치구의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몇 곳이나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성인 PC방에 대해서도 조만간 단속을 하겠지만 PC에 저장하지 않았다면 아동음란물 소지로 볼 수 없어 사법처리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학폭 기재 철회” 교육감실 점거 농성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6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를 전남도교육청에 요구하며 도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단순 가담자까지 전과

자로 낙인찍는 것과 같다”며 “대학입시와 취업이 어려워 인생의 나오자를 만드는 비교육적이고 초보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장차 토 교육감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부 기재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적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도교육감실 농성을 계속하겠

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교과부 훈령에 따라 초·중·고교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도록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 등 4명이 이날 농성에 참가했으며 장만재 도교육감은 이날 서울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송원학원 제재 집행 정지 정당”

법원, 시교육청 항고 기각

광주고법 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최근 ‘학교법인 송원학원에 대한 학급감축 등 행정적 제재조치’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광주시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행정적 제재조치 집행으로 송원학원에 (발생할 수 있는)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달리 집행정지조치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15일 송원학원에 산하 고교의 학교시설공사 부당수의 산하(3억4000여만원 상당), 춘지수수 관련 교사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의, 경고,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리자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며 송원고교에 대해 2년간 3학급 감축, 목적사업비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살 여아 성폭행범 검, 징역 15년 구형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씨에게 징역 15년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검사)는 6일 수돗가에서 놀던 여아(아)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고인에 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 7월3일 밤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던 이웃집 네 살배기 아(아)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은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나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증상을 보이고 있다. /연협뉴스

상품권 현금화 사용 여부 추궁

檢, 박광태 전시장 조사 사법처리 조만간 결정



‘의문의 상품권 26억원 구매’와 관련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6일 오전 검찰에 출두해 박광태에게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광주지검에 나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재임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실·국·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26억820만원 상당의 특정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시장에 대해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상품권 26억원 어치 구매사실이 알려진 뒤 한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을 고발하자 시장 비서실, 총무과, 당시 상품권 구매를 담당한 공무원 이모(47)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씨와 광주 모 백화점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던 이씨의 형이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자기의 사용자 상당부분의 분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과 함께 이씨, 이씨의 형,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의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

‘의문의 상품권 구매’와 관련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6일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10시간이 넘도록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 검찰 관계자는 “생각보다 조사가 깊어졌다”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봐야겠지만 2~3번까지만 부르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광주 모 백화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S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5억8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외상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법원,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서용석)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재판부는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 통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

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동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재판부는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 통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

유형비 마련위해 딸 집값 싹쓸이

○유형비 마련을 위해 집에 도둑이 든 것처럼 가장하고 아버지의 집값과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서행.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제대한 박모(22)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 안방에 침입해 아버지(53)의 집값과 현금 220만원 상당을 훔쳐 유형비 등으로 썼다는 것. ○경찰은 사건 현장에 발자국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어 3일간 수사 끝에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건의하기로 결정.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llergy treatment. Title: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Features a photo of a doctor and text describing the treatment process and benefits.

Advertisement for '유·스퀘어사우나' (Yusquare Sauna). Features a photo of a menu and text listing servic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